

[전문가 視覺] 한국형 '긴급물자 조달체계' 만들자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국가계약연구센터장 | 승인 2022.09.19 07:00



코로나19 초기의 마스크와 백신 공급 대란의 사례에서 보듯 긴급 상황에서 필수 물자의 신속한 조달은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팬데믹, 전쟁 등으로 인해 과거 촘촘하게 운영되던 석유, 가스 등 에너지를 포함한 필수 원자재, 방역물품 등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훼손돼 자국 중심의 지역 공급망으로 재편되는 최근의 현상은 긴급조달 대응체계를 확충할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제기한다.

주요 선진국은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점진적으로 긴급 물자조달 체계를 고도화해왔는데, 특히 미국의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이 특징적이다. 본래 DPA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철강 긴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됐다.

DPA에 근거해 미국 대통령은 안보 분야에 필요한 물자 공급을 기업 측의 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기업에 요구할 수 있고, 물자 생산기업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며, 물자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3월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마스크와 인공호흡기, 보호복 등 물자 생산을 확대하도록 해 자동차업체인 GM이 인공호흡기를 생산하고, 3M은 마스크의 해외수출이 금지되기도 했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안센이 개발한 백신을 다른 제약회사인 머크도 생산하도록 명령해 미국 성인 전체가 맞을 백신 물량인 6억 회분 확보 시점을 2개월 단축시켰고, 최근 코로나19 진단키트 부족 사태에 키트 생산을 명령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에 더 나아가 DPA가 주요 자원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전기차 전환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 전기차 및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공급체계를 확보하는 데에도 적용될 예정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리튬·니켈·흑연

등 소재에 대해 DPA를 발동하게 되면, 해당 광물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은 정부로부터 약 7억5000만 달러를 지원받고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미국의 긴급조달 대응체계는 EU 등이 긴급상황 시 공공계약과 관련된 일반경쟁원칙의 예외 인정 등 기존 법규에 대한 적극적 유권해석과 다수공급자계약·역동적 구매시스템 등 기존 공공조달체계의 활용 확대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과는 달리 매우 적극적 양상을 지닌다.

여러 선진국가들의 사례 중 어느 접근 방식이 합리적이고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사례인지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 국회에서도 감염병 대유행이 발생하는 경우 의약품과 의료물품의 긴급생산을 지원하는 감염병대비의약품법 등 특별법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벌칙규정·재정지원 등을 통해 미국처럼 생산을 강제할 방안까지는 관련 입법안이 나아가지 못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궁극적으로 미국 국방물자법의 사례처럼, 정부의 긴급 생산·조달 명령권한을 담은 법적 체계 마련이 팬데믹 등 긴급상황에 대한 좀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 추진 시 관련 WTO협정, FTA 등 국제통상규범에의 저촉 가능성 또한 엄밀히 살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향후 팬데믹을 포함한 위기상황에 대응해 우리 여건에 적합한 긴급물자 조달체계 마련에 관심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국가계약연구센터장